

한국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탈북 모자(母子)의 죽음

2019. 08. 22. | CO 19-17

김 수 경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것도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돼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도울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사망 당시 통장잔고가 0원일만큼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위해서는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오랜 기간 추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데, 이 영역은 단순히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우리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31일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지 두 달이나 지난 뒤 수도검침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집 안에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풍요와 잉여의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한 모 씨(42)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무렵 '고난의 행군'으로 칭해지는 지독한 식량난을 겪은 세대이다. 북한이 물질적으로 가장 궁핍했던 시기 중 하나이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탈북 행렬이 줄을 이었다. 한 씨가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09년도의 일로, 탈북민 입국자 수가 역대 최고치(2,914명)를 기록하던 해이다. 생계형 탈북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다.

한 씨는 입국 초기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안에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경찰)신변보호관과 긴밀하게 연락도 주고받고,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도 시작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중국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에는 아들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이 종사하던 조선업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한 씨 가족은 2017년 중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1년 뒤, 한 씨는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인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할 경우 우리 사회가가진 대비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되 5년간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이들이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이나 재난과 같은 사회적 불안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정착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씨의 경우도 남편이 일하던 조선업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2017년 중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도 어쩌면 한국에서의 정착이 사실상 실패했고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그에게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의 기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한 맹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입국 이후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정착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면 추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착의 여부는 거주 기간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정착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한 씨가 최근 이혼을 겪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취약한 신분에 더해 한부모 가정이라는 신분은 한 씨를 더욱 생활고에 노출시켰을 것이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2%이며 2018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무려 85%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지만 정착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 문화적 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씨의 경우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에 더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자녀로 둔 상황에서 원활한 구직활동이나 생계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보여주는 관심과는 대비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오는 것이 아니므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불화나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1)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이들의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또는 가정불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통일의 역군'이라는 이름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 이들이 여성이자 어머니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미시적 접근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추상수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접하는 가장 일차적인 집단은 가족과 지역사회다. 많은

¹⁾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적 정착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은 물론 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경찰 핫라인, 쉼터,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부부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사회를 경험한다. 당연히 가정생활의 안녕이 한국사회로의 성공적 정착과 무관할 수 없다. 한 씨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우울감으로 인해 정착의 의지가 매우 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선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일차적 공간은 지역사회다.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이웃, 인적 네트워크가 가까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좋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간의 네트워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논한다. 맞는 이야기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비극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5년간 통일부 관할의 보호 기간이 지난 뒤 이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모든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2019년 6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3,022명이다. 각각의 사례는 다 특별하고 소중하다. 이 모든 사례의 특성을 다 고려하고 아우르는 제도를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식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힘들었던 탈북과정, 한국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을 우리 사회 내부로 더욱 끌어들이려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14.6%나 됐다. 이는 일반 국민이 5.1%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외로움, 고독 때문"이라는 응답이 20.7%나 됐다(일반 국민의 경우 12.3%). 경제적



CO 19-17

어려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심리적 어려움은 돈이 해결해주지 못한다. 결국은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KINU 2019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